

통권 22-9호

-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 -

예산·재정정책 정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목 차

I. 경제분야(1건)	5
1. 충남경제-2022년 7월 충남 경기종합지수 / 기경위	7
II. 재정분야(3건)	9
1. 민선8기 지방재정의 변화-지방세입 구조의 변화와 개선방향 / 기경위	11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 기경위	13
3.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 기경위	14
III. 정책분야(13건)	19
1.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기경위	21
2.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 기경위	22
3.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 기경위	24
4.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 기경위	33
5.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 기경위	34
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 행문위	35
7.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실효성 제고방안 / 행문위	36
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복환위·37	
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 농수위	38
10.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 농수위	42
11. 마른 모래에서 물 쫄쫄...샌드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성공 / 안건소위	44
12. 평화에 대한 위협 증대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 교육위	49
13.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51
IV. 법률 재·개정(2건)	55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봉민의원 등 11인	57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홍의원 등 11인	58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2022년 7월 충남 경기종합지수 [기경위]





I. 경제분야(1건)

1. 충남경제-2022년 7월 충남 경기종합지수 / 기경위

- 7월 전국 동행종합지수는 소매판매액지수 감소하였으나, 수입액, 내수출하지수 등이 증가해 전월대비 0.7%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1.8로 전월대비 0.5p 상승
- 7월 전국 선행종합지수는 코스피, 장단기금리차 등은 감소하였으나, 기계류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이 증가해 전월대비 보합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9.4로 전월대비 0.3p 하락
- 7월 충남의 동행종합지수는 합성수지·기초유분 등 석유화학 관련 중간재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가격 하락, 디스플레이산업 재편에 따른 생산량 감소, 높은 수입물가로 인한 수입액 증가와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소비패턴 변화로 대면 소비 위축이 이어지며 전월대비 0.2% 감소한 108.4를 나타냄
 -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100.7로 전월대비 0.3p 하락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수입액(4.3%), 비제조업인력사정 실적 역(0.5%), 고용률(0.2%)은 증가, 중간재수출액(-2.0%), 광공업생산지수(-1.5%),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1.2%), 판매전력량 제조업(-0.7%)은 감소
- 7월 충남의 선행종합지수는 자본재수입 3개월 연속 증가, 지난달 보합세를 유지하던 원자재가격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경기변동요인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본격화되면서 주요 주가지수인 반도체 지수 5개월 연속 하락, 에너지화학 주가도 2개월 연속 하락, 지역 디스플레이산업 재편에 따른 전자부품 생산량 감소도 이어지며 전월대비 0.9% 감소한 106.9를 나타냄
 - 향후 경기를 나타내는 순환변동치는 97.2로 전월대비 1.2p 하락

- 주요지표의 전월비를 보면, 자본재수입액(13.4%), 제조업제품재고 전망 역(1.7%), 신규구인인원(0.4%)은 증가, 전자부품 등 제조업 출하지수(-19.1%), KRX반도체 지수(-7.8%), 원자재구입가격 실적(-3.4%), KRX에너지화학지수(-1.4%)는 감소

┃ 출처 : 충남연구원(2022. 9.) ┃

II. 재정분야(3건)

1. 민선8기 지방재정의 변화-지방세입 구조의 변화와 개선 방향 [기경위]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기경위]
3. 국고보조사업의 자원분담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기경위]



II. 재정분야(3건)



1. 민선8기 지방재정의 변화-지방세입 구조의 변화와 개선방향 / 기경위

-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22년 4월 말 「지역 균형발전 비전 대국민 발표」(2022.4.27.)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15대 국정과 제시하였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능 재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분권 강화’와 재정자주도 기반의 목표 설정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재정력 강화’주목
 -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재정 분권’을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던 문재인 정부와 다르게 새 정부는 교부세 법정률 인상 등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력 강화에 중점
- (참여정부 이후 지방세입 구조의 변화) 참여정부가 출범한 2000년대 초반부터 최근 까지 지방세입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방세입 각 항목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입 항목을 「지방재정연감」에 수록된 명칭과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을 고려 재분류하고, 특히 2014년 세입 과목 개편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정의를 기준으로 2013년까지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재구성해, 이 세입 자료를 기반으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방세입 구조의 변화를 살펴봄
- (지방세입 구조의 문제점1) 국세 중심의 조세 구조
 - 지방자치 부활 이후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인 1998~2000년 등 예외적인 시기를 제외하면 다소의 변동성을 보이며 증가하는 추세임
 - 최근 문재인 정부의 1단계(2019~2020) 재정 분권 추진으로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면서 지방세 비율이 많이 증가했고 2단계(2022~2023) 재정 분권이 마무리 되는 시점에 이르면 지방세 비율은 27% 전망임

○ (지방세입 구조의 문제점2) 국가 주도복지사업 팽창에 따른 보조금 확대

- 총조세 대비 지방세 비율이 최근에서야 25% 문턱을 간신이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심화라는 새로운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중앙정부 주도로 노인과 영유아 보육 관련 복지사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남
- 그런데 대부분 복지사업이 지방의 대응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가 주도의 국고 보조사업 틀로 시행되면서 국고보조금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방의 대응 지방비 부담도 급속히 커짐

○ (지방세입 구조의 문제점3) 중앙정부 의존적 세입 구조 :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시책 확대가 주로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면서 국고보조금이 많이 증가했고 그 결과 지방재정의 중앙정부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음

○ (지방세입 구조의 문제점4) 지방간 재정 격차 지속 : 최근 수도권 초집중 경향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를 지속해서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어, 그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다시금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 이런 수도권 쏠림 현상은 궁극적으로 경제력과 이에 기반한 세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심화하는 주요 원인 이기도 함

○ (지방세입 개선 방향1) 강력한 재정 분권 지속 추진

- 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경향이 향후 20년 안에 더욱 급속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출산율 반전 및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지출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을 의미함
- 이에 최근 20년 동안 진행된 국고보조금 급증 경향이 가속화되고 지방의 대응 지방비 부담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의 중앙의존성이 심화하는 동시에 재정 경직성이 더욱 높아질 개연성이 큼
- 따라서 위와 같은 중앙정부 의존적 세입 구조의 심화를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지방 이양 등 강력한 재정 분권이 계속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지방세입 개선 방향2) 복지 빅딜 추진 : 기초연금과 같이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하는 전국 공통의 주요 사업은 국가가 담당하고 영유아보육사업과 같이 지역 밀착형 사업은 지방이 담당하는 것으로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 사업의 국가 이관은 지방의 미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고유 자체 사업추진 여력을 확보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방세입 개선 방향13)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 소득세와 법인세와 같은 세수 시장성이 높은 국세의 일부를 과감히 지방세로 전환하고 복지 빅딜 등 국가와 지방간의 기능 재조정을 수행하되 전반적으로 지방재정의 순증이 이뤄지도록 추진이 필요함

출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2022. 9.)

2.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 기경위

-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69조 원, 통합재정지출은 284.9조 원으로 재정수지는 15조 9,093억 원 적자를 예상함
 - 통합재정수입은 자체 수입 및 이전수입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2.0% 증가함
 -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은 131.8조 원으로 국내 세수 여건 개선에 따라 내국세에 연동되어 지급되는 지방교부세 18.8%(9.3조 원) 증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보조금 5.4%(3.8조 원) 증가에 기인
- 통합재정지출은 사회복지, 일반 공공행정 분야 등의 증가로 전년 대비 9.8% 증가함
 - 사회복지 분야 87.6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7.2조 원) 증가, 일반 공공행정 분야 15.6조 원으로 전년 대비 22.9%(2.9조 원) 증가, 교육 분야 전년 대비 14.1%(1.9조 원) 증가함
 - 예비비는 유일하게 전년 대비 2.3%(867억 원) 감소함
 - 보전 수입으로 분류되는 순 세계잉여금을 통합 재정수입에 반영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조 4,812억 원 적자로 예상함
- 2022년 당초 예산 기준 전국평균 통합재정자립도는 49.6%, 통합재정자주도는 72.0%로 낮은 수준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재정 불균형이 발생

- 통합재정자립도는 2019년 51.3%, 2020년 50.6%, 2021년 49.2%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49.6%로 소폭 증가하였음
 -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본청 74.9%)와 가장 낮은 지자체(전북 본청 24.5%)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통합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강남 67.9%)와 가장 낮은 지자체(경북 양양 6.7%)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함
 - 통합재정자주도는 2019년 72.8%, 2020년 72.7%, 2021년 70.3%로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2년 72.0%로 증가하였음
 - 243개 지자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곳이 54개로 22.2%를 차지함
 - 광역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서울 본청 75.5%)와 가장 낮은 지자체(전북 본청 39.5%)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치단체 중 통합재정자주도가 가장 높은 지자체(경기 과천 81.1%)와 가장 낮은 지자체(부산 북구 26.6%) 간 편차도 크게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있어 지방세 또는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존재하며, 세외수입의 불안정성과 쏠림 현상이 지속됨
-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40.3%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23.0%에 달하고 있음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 동향 보고서(2022. 8.) ▮

3. 국고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방안 모색 / 기경위

○ 보조율 체계와 재원분담 현황

- **(보조율 체계)** 우리나라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만 보조율 체계는 동법과 함께 일부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
 - ▶ 「보조금법」에 의한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106개이고, 기준보조율 개수는 총 121개에 이르며, 이 중 이원 구조가 28개, 삼원 구조가 6개 존재하고, 자치단체 재정

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을 운용

- ▶ 「기초연금법」에 의한 국고보조율은 기본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자주도를 기준으로 40%~90%의 범위에서 9개 범주의 보조율 체계로 구성되며, 최근 재정자주도가 50% 미만인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추가부담비율 제도도 운용
- **(재원분담 현황)** 2021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총 122조 6,006억원으로, 국비 85조 7,581억원(69.9%), 시도비 19조 220억원(15.5%), 시군구비 17조 8,204억원(14.5%)으로 구성
 - ▶ 분야별로 볼 때 2021년 기준 국고보조율은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72.5%로 평균(69.9%)을 상회하며, SOC 분야 사업과 기후위기 시기에 날로 중요해지는 환경보호 분야 사업은 각각 58.7%, 59.5%로 다른 분야 사업보다 낮은 편
 - ▶ 시·도별로 보면 2021년 기준으로 국고보조율은 서울-지방 간 이원화된 보조율 체계로 말미암아 서울이 60.1%로 가장 낮고, 기타 지역이 그보다 높은 70% 내외 수준

○ 재원분담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협의 제도와 심의기구로서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 두 제도는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운영됨
- 우선 지방비 부담 협의는 각 부처가 행안부에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협의를 요청하고 행안부에서 사업별 지방비 부담 수준의 적정 여부 검토를 통해 중점 협의대상을 선정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통보·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이뤄짐
- 행안부는 이 지방비 부담 협의 과정에서 수집된 중점협의대상에 대한 부처와 자치단체 의견을 검토하여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상정 사업을 선정하고 동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본위원회를 통해 지방비 부담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

○ 재원분담 관리체계 문제점

- 관리체계 측면
 - ▶ (지방비 부담 협의 관련) 실질적 협의를 위한 준비 부족,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및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관련) 지방 참여 보장 미흡, 의결 사항의 환류 부족, 광역·기초 간
- (조정 논의 미흡) 재원분담 측면
 - ▶ (「보조금법」에 의한 재원분담 방식 규율의 경직성) 환경 변화에 따른 탄력적 대응 부족, 기준보조율 적용대상 일부 미활용 및 적용방식의 일관성 결여, 보조율 설정의 높은 임의성
 - ▶ (기타) 차등보조율의 낮은 실효성, 지방비 부담 증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 위축

○ 국고보조사업의 국가-지방 간 재원분담 관리체계 개선 방안

- 첫째, 지방비 부담 협의 단계에서 국고보조사업별로 재원분담 실태와 이것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존 분석 틀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
 - ▶ 이 같은 지방비 부담 수준 평가 틀에 입각하여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적 검토가 이뤄지는 경우 중점협의대상 사업 선정 방식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그 검토 결과에 대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의견 회신을 유인하는 계기로 작용가능
 - ▶ 아울러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매년 작성·발표함으로써 재원분담 개선에 관한 논의가 국회 상임위, 중앙지방협력회의 등에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의 조성 가능
- 둘째, 지방비 부담 협의 대상 사업 중 지방재정영향평가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
 - ▶ 신규사업이 아닌 계속사업이더라도 경비 증가속도가 빠를 경우 궁극적으로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 부처가 행안부에 제출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심층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지방재정 부담 규모 및 변화가 개별 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지방비 부담 협의 및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를 관련 안전에 대한 주요 판단 근거로 활용

- 셋째,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에 대한 지방 참여를 활성화하고 의결 사항의 환류 강화
 - ▶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개진되고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의 참여 수준을 높일 필요
 - ▶ 의결 사항의 환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제6항 단서에 적시된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예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제한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
- 넷째, 「보조금법」을 분법화하거나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이끌고, 재정여건과 실제 복지수요를 적절히 반영하는 방향의 차등보조율 체계 개선을 도모
 - ▶ 「보조금법」을 개별법 체계로 분법화하여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재원분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게 하거나 현행 「보조금법」상의 기준보조율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보조율 설정 시 기재부의 재량 여지를 좁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 재정운용을 도모
 - ▶ 또한 차등보조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재정자주도와 분야별 재정지출지수를 합리화 하여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반영한 보조율 차등화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틀을 구축

▮ 출처 : 한국지방세연구원(2022. 9.) ▮

Ⅲ. 정책분야(13건)

1.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기경위]
2.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기경위]
3.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기경위]
4.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기경위]
5.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기경위]
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행문위]
7.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실효성 제고방안 [행문위]
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복환위]
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농수위]
10.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농수위]
11. 마른 모래에서 물 콧물...샌드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성공 [안건소위]
12. 평화에 대한 위협 증대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교육위]
13.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III. 정책분야(8건)



1. 최근 유럽 이주민 유입 동향 및 정책 시사점 / 기경위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 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전쟁 발발 후 6개월간 약 720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유럽 국가로 유입됨
 - 팬데믹, 전쟁, 이상기후 현상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경제난은 아프리카, 남아시아 등 저소득지역으로부터 유럽 등 고소득 지역으로의 이주민·난민 유입을 가속화시킴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통제 여파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정규·비정규 이주 및 난민 신청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유럽연합은 이주민·난민 유입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함
 - 유럽연합은 ‘이주와 이동에 대한 포괄적 접근(2005년)’, ‘유럽이민의제(2015년)’, ‘이주 및 난민에 관한 신헌정(2020년)’ 등을 거치며 국경통제 및 난민 관리체계를 발전 시켜옴
 - 주요 이민 송출국인 아프리카 주요국과는 ‘이동성 파트너십’, ‘라바트 프로세스’, ‘카르툼 프로세스’ 등 양자 및 다자간 협의를 통해 불법 국경 통과를 줄이는 한편, 이민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자 노력함
 -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며, ‘임시 보호제도’를 통해 우크라이나 출신 이주민에게 주거, 노동, 의료, 교육, 이동 등의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난,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 내 이주민 유입 사례 연구를 통해 이주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시사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이주민 유입은 유럽 수용국의 노동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전체 고용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 증가, 주택가격 상승, 재정지출 부담 증가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침
 - 차별, 사회갈등, 분쟁, 국경지역 무력충돌 등 사회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민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며, 이주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한 송출국과 수용국 공동의 노력이 요구됨
 - 또한 가까운 미래에 한국에 대한 이주민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9.) ▮

2. 인도 농산물 수출 증가의 대내외 요인과 시사점 / 기경위

-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년을 기점으로 지속 증가해 2021/22년 전년동기대비 17.7% 증가한 4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코로나19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인도의 농산물 수출은 2019/20 ~2021/22년 기간 연평균 21% 성장하였음
- 특히 밀과 쌀, 설탕의 수출이 대폭 증가했는데, 2021/22년 인도 곡물 수출은 129억 달러 규모로 전년동기대비 93% 증가했으며, 당류 수출은 51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32% 증가함
 - 같은 해 기준 인도가 농산물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방글라데시로, 수출액은 2019/20년 대비 464% 증가한 3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인도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주요 요인은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 및 수출 제한조치로 국제 가격이 상승하자 재고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한 인도 농산물에 대한 대외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임
 - 세계 다른 주요 농산물 수출국의 생산량이 가뭄, 홍수 등 기상 이변으로 감소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대란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져 일부 국가의 경우 수출제한 조치를 시행해 교역량이 감소하였음
 - 반면 인도는 작황 상황이 양호했으며, 2018년에 농산물 수출을 특화한 정책(AEP)을 발표하고 △수출 클러스터 조성 △신제품 개발 등을 추진한 것 또한 농산물 수출이 증가한 요인으로 분석됨
- 향후 인도정부는 자국 농산물의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저변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주요 농산물의 수급이 불안정해질 경우 자국 식량 안보를 강조하며 즉각적인 수출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음
 - 인도 정부는 2022년 5월에는 밀 수출을 금지했으며, 8월에는 밀가루 수출을 금지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의 식량 수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인도와의 농산물 교역을 확대할 경우, 주요 작물에 대한 인도 정부의 관리 및 수출 환경을 고려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우리 정부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하여 자급률 제고와 해외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인도로부터 당밀, 옥수수, 참깨 등 수입품목이 증가하는 추세임
 - 우리나라의 발전된 농업기술을 인도의 풍부한 인적자원과 자연환경에 접목시킨 현지 맞춤형 농업 협력을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인도에 한-인도 식품산업 단지를 조성해 장기적인 식량 공급처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음
 - ※ 식량 수입 의존도가 높은 UAE는 인도 내 식품산업 단지 조성에 20억 달러를 투자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식량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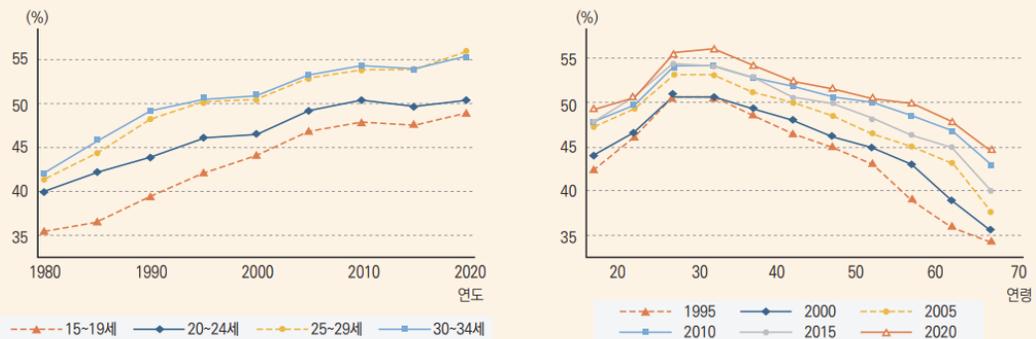
▮ 출처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22. 9.) ▮

3.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 기경위

I.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 심화

- 전체 인구가 급속히 고령화되는 추세에서 지방의 인구 고령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년층 유출이 핵심적인 원인으로 지목됨
- 수도권의 출산율이나 사망률은 비수도권보다 낮음
 -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서울(0.64)이 특광역시 평균(0.74)보다, 경기(0.88)가 도 지역 평균(0.94)보다 각각 낮았고,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서울(2.6)과 경기(2.9) 모두 전국 평균(3.0)을 하회하였는데, 2021년에도 유사한 추세로 잠정 집계됨
- 하지만 최근 5년간 비수도권의 평균연령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
 - 2015~20년간 부산(2.8), 대구(2.8), 광주(2.9), 대전(2.8), 울산(3.1), 강원(2.9), 전북(2.8), 경북(2.8), 경남(2.9) 등의 평균연령 증가폭은 전국 평균연령 증가폭(2.5)을 상회
- 이러한 현상에는 청년층 수도권 순유입 증가가 중요하게 작용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2010년대 초반에 감소하다 최근 다시 심화
 - 특히 20대 후반~30대 초반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 두드러지게 높고, 최근 타 연령대에 비해 빠르게 상승 중

그림 1. 청년층의 수도권 거주 비중 추이



주: 각 연도-연령대 내 수도권 주민등록자 비중.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연감연구」, 1980~2020. 한요섭(2021)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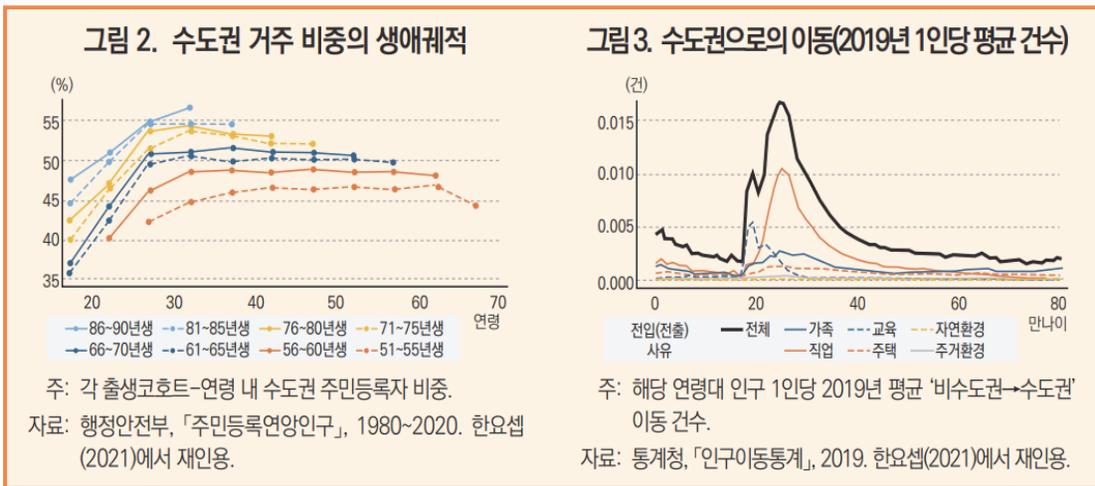
■ 청년층의 지역 선택은 높은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결정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각 출생코호트별 수도권 거주 비중은 20대와 30대 초반에 약 10%p 상승한 이후 생애 기간 동안 계속 유지되는 경향

- 20대 초반에는 진학, 20대 후반~30대 초반에는 취업 사유의 수도권 유입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음

-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이동의 경우에는 진학 및 취업 사유의 이동이 전체 시도간 이동보다 2배 이상 높는데, 특히 여성에서 더욱 높음

○ 청년층이 수도권 내에 정착하여 가정을 이루면, 새로운 세대는 생애 시작부터 수도권 거주 비중이 증가하므로 일종의 피드백 효과가 발생



II. '지방소멸' 대응정책

■ 청년층 인구유출이 야기하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

○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2020년) 및 동법 시행령 개정(2021년)을 통해 '인구 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예정

- '인구감소지수'를 바탕으로 선정된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역주도형 계획 수립, 지방소멸대응기금(연간 1조원, 10년간)과 국고보조금, 재정·세제·규제상 제도 특례 등의 지원을 집중(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1. 10. 18)

○ 그 외에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도 포함

- 예컨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5)'(교육부 보도 자료, 2021. 2. 28)에서는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인구유출을 막는 '댐'으로서의 지역 협업시스템 구축 및 그 핵심 축으로서의 지방대 역할 재정립"을 강조

■ 이러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주어진 예산 제약 내에서 보다 효과적인 방향으로 지원을 집중할 필요

- 일본의 경우 다양한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의 도쿄권 순유입은 20년 이상 지속
- 대졸자의 높은 지리적 이동성을 고려하면, 지방대학의 정원 및 재학 비중을 늘리더라도 지방의 대졸자 인구 비중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e.g. Bound et al., 2004)
- 진학과 취업 단계의 지역 선택은 여러 이유로 연계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

III. 진학 및 취업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

- 2005~09년 고등교육기관 입학코호트를 중심으로 고교소재지와 졸업 이후의 거주 지역을 살펴본 결과, 고등교육기관 유형별로 이동 패턴이 크게 상이하며, 주로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진학과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이 나타남
- 4년제 대학의 경우 진학 단계에서는 전국(경기·인천 포함)으로부터 서울로의 유입이 높고, 졸업 이후 취업 단계에서는 전국으로부터 수도권 전체로의 순유입이 발생

○ 반면, 전문대학의 경우 진학 단계에서는 서울·인천 순유출과 경기 순유입 등 수도권 내 진학을 위한 이동 비중이 높고, 졸업 이후 취업 단계에서는 반대로 경기 순유출과 서울·인천 순유입 등 수도권 내 이동이 발생

■ 각 단계별 시도 간 이동의 결정요인으로 이동거리가 중요하게 작용하지만, 그 외에도 진학단계에서는 서울 소재 대학 내지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 여부,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 및 권역 내 거점도시 여부 등이 중요하게 작용

○ 4년제 대학의 경우 진학 단계에서는 전국으로부터 서울로의 유입 및 인근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이 뚜렷하고, 취업 단계에서는 전국(특히 수도권 인접 권역)으로부터 수도권으로의 유입 및 권역 내 거점도시로의 이동이 빈번
 - 진학지역 결정요인으로는 지역별 대학 정원과 성적을 통한 입시 과정 등이, 취업지역 결정요인으로는 일자리 분포 및 충청권 이남 여부 등이 중요

○ 전문대학의 경우 진학 단계에서는 시도 내 또는 인근 시도로의 진학 비중이 높고, 특히, 서울·인천으로부터 경기로의 이동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취업 단계에서는 수도권으로의 재유입 혹은 각 권역 내 이동이 빈번
 - 진학지역 결정요인으로는 지역 내 전문대학의 정원 등이, 취업지역 결정요인으로는 지역 내 일자리 분포와 고교소재지를 비롯한 연고지가 중요

표 1. 시도 간 이동: 4년제 대학 진학

(단위: %)

대학교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서울	51.2	1.9	20.3	5.1	3.6	2.4	8.4	1.5	0.6	0.6	0.3	1.8	0.9	0.1	0.3	0.1
인천	27.7	14.9	19.0	4.1	4.7	2.8	17.4	2.5	0.8	0.8	0.5	2.2	1.1	0.2	0.5	0.2
경기	33.5	2.8	24.4	6.4	6.1	2.7	15.5	2.1	0.6	0.5	0.3	2.1	1.2	0.2	0.3	0.1
강원	17.1	1.3	6.0	55.6	4.0	3.4	3.5	0.8	0.8	0.3	0.6	4.2	1.7	0.2	0.5	0.1
충북	14.4	0.8	3.6	2.2	46.4	14.0	8.1	1.3	0.8	0.7	1.1	3.7	1.0	0.1	0.7	0.2
대전	14.7	0.4	3.3	0.9	3.8	54.5	14.4	1.6	0.5	0.6	0.7	1.4	1.4	0.1	0.7	0.1
충남	17.2	0.8	7.3	1.6	4.6	21.7	33.8	7.0	0.7	0.6	0.3	2.3	1.1	0.1	0.6	0.2
전북	10.7	1.0	4.7	0.9	1.5	3.8	3.8	59.5	4.7	1.8	0.9	3.8	1.5	0.2	0.6	0.3
광주	14.1	0.9	4.2	0.8	1.0	1.4	1.9	3.7	58.6	10.5	0.2	0.8	0.8	0.2	0.6	0.2
전남	12.6	0.9	4.6	0.9	1.8	2.4	4.4	8.0	22.4	27.7	0.5	3.0	5.1	0.2	4.8	0.1
대구	11.5	0.7	3.3	1.1	1.0	1.6	2.0	0.7	0.3	0.2	30.7	42.2	2.4	0.3	1.3	0.1
경북	13.8	1.2	5.9	2.1	3.8	6.0	4.2	3.3	0.8	0.8	9.5	38.1	6.3	0.9	2.3	0.2
부산	10.7	0.6	3.2	0.8	0.9	1.5	1.6	0.6	0.3	0.4	1.3	3.4	66.2	1.1	6.5	0.2
울산	12.5	1.2	3.6	0.9	1.5	2.6	2.1	0.5	0.6	0.2	4.2	16.9	18.3	26.2	7.9	0.1
경남	11.9	0.9	3.6	1.2	1.7	2.6	3.1	1.6	1.5	2.7	3.0	6.6	23.9	1.0	34.4	0.1
제주	14.6	0.7	5.5	1.3	2.6	1.8	4.2	2.0	0.6	1.2	1.0	1.7	2.6	0.7	1.4	57.9

주: 2005~09년 4년제 대학 입학코호트의 고교소재지별 대학소재지의 비중이며, 10% 이상은 음영처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7~18. 한요섭(2021)에서 재구성(p.24).

표 2. 지역 간 이동: 4년제 대학 졸업 후 거주지역

(단위: %)

거주 대학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	대전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서울	58.2	4.4	25.1	0.8	0.9	1.7	1.0	0.6	0.7	0.5	1.0	1.2	1.2	0.7	1.1	0.2
인천	24.9	35.8	26.3	1.4	1.2	1.6	1.1	1.1	0.6	0.6	0.3	1.2	1.0	1.1	1.4	0.1
경기	37.8	7.4	44.5	1.0	0.7	1.0	1.1	0.6	0.7	0.5	0.7	1.2	1.0	0.5	0.8	0.3
강원	28.5	3.8	25.0	34.3	0.9	0.8	1.4	0.5	0.6	0.5	0.6	1.4	0.5	0.3	0.4	0.3
충북	21.9	4.6	25.3	1.7	31.1	4.1	3.3	1.1	0.7	0.8	0.7	1.6	0.8	0.5	0.6	0.6
대전	17.0	2.3	10.3	1.3	4.4	47.5	7.2	1.2	0.7	0.5	1.0	2.2	0.6	0.6	1.7	0.2
충남	24.9	8.9	34.5	0.9	2.1	6.2	15.7	0.8	0.5	0.6	0.8	1.1	1.1	0.2	1.0	0.4
전북	14.2	2.4	12.6	1.1	1.2	2.3	3.8	50.5	2.8	2.7	0.3	3.1	1.0	0.2	1.1	0.4
광주	11.6	1.7	6.1	0.6	0.9	1.4	0.7	3.8	56.9	10.8	0.5	0.9	0.8	0.6	2.1	0.3
전남	11.5	2.6	8.8	0.7	1.2	1.9	1.6	2.4	18.6	38.5	0.5	1.1	2.7	0.7	6.8	0.3
대구	11.7	1.0	5.8	0.9	1.2	2.1	0.5	1.2	0.5	0.4	53.1	12.0	2.4	2.9	3.9	0.1
경북	13.4	1.9	8.2	1.1	1.2	1.4	1.4	1.8	0.3	0.8	31.0	25.6	3.2	4.6	3.7	0.3
부산	9.7	1.3	4.4	0.5	0.5	1.1	0.8	0.2	0.4	1.0	1.4	2.4	57.5	4.8	13.7	0.4
울산	14.4	2.0	3.9	0.1	0.2	0.5	0.6	0.3	0.4	0.5	0.6	4.1	6.9	60.6	4.7	0.0
경남	9.4	0.6	5.0	0.5	0.8	0.9	0.6	0.4	0.6	4.3	1.6	2.1	13.4	4.7	54.9	0.3
제주	13.3	2.6	4.8	0.4	0.3	1.0	0.8	0.6	0.0	0.6	0.8	0.4	0.7	0.0	0.7	72.9

주: 2005~09년 4년제 대학 입학코호트의 대학소재지역 졸업 이후 1~2년차 거주지역의 비중이며, 10% 이상은 음영처리함.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2007~18. 한요셉(2021)에서 재구성(p.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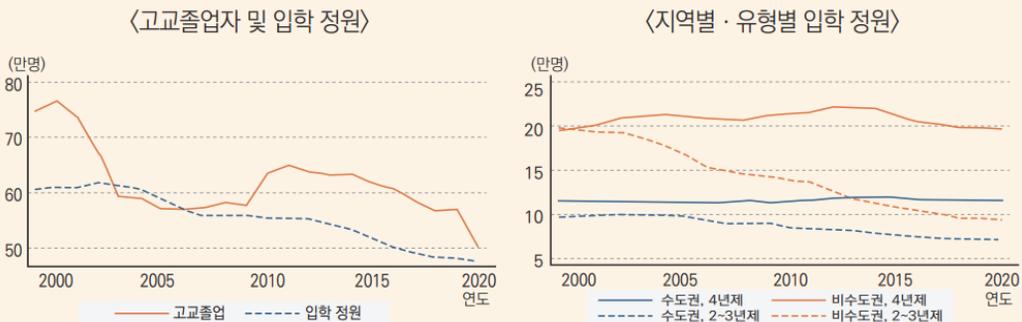
IV. 진학 및 취업단계에서의 지역 간 이동의 연계성 분석

■ 각 단계별 지역 이동의 연계성에 관한 실증분석: 진학 시 인구총격

○ 지난 2000년대 초중반에 지금과 유사한 학령인구 감소 위기가 있었음

- 2005년 이후 전문대학 정원 감축과 함께 2010년대 2차 예코붐 세대(1991~96년생)의 대학 진학으로 이러한 위기가 지나감
- 2000~2020년 기간 동안 4년제 대학 정원은 수도권 약 12만명(그중 서울이 약 9만명), 비수도권 약 20만명 선이 유지됨

그림 4. 연도별 고교졸업자 및 입학 정원의 추이



주: 입학 정원은 4년제 대학 및 2~3년제 전문대학의 정원을 모두 포함한 전체 정원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1999~2020. 한요셉(2021)에서 재인용.

- 지역(권역) 내 인구충격 발생 시 진학지역 선택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 분석하고, 진학과 취업지역 선택의 연계성을 분석
 - 지역 내 고교졸업자의 증감이 진학 시 타 지역으로의 이동 증가로 이어지는가?
 - 인구충격으로 인한 타 지역 진학은 취업 시 지역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주어진 정원 제약하에서 고교졸업자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때, 타 지역(권역) 4년제 대학으로의 진학을 위한 이동이 증가함
 - 지역 내 4년제 대학 정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타 지역으로 진학
- 하지만 인구충격으로 타 지역에 진학한 학생들은 취업 단계에서 고교소재지로 재이동
 - 특히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인구충격으로 비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 취업 단계에서 88%가 수도권으로 회귀
- 이러한 분석 결과는 4년제 대학 입학 정원, 특히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이 졸업 이후 청년층의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함을 시사함
 -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여서 지방대학 진학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대부분 졸업 후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와 취업
- 더구나 수도권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지역 내 고교졸업자 대비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이 충분하지 않아 인적자본 형성에 왜곡 초래
 - 2020년 기준 지역별 고교졸업자 수 대비 전체 고등교육기관 정원의 비중은, 비수도권이 111%인 데 비해 수도권은 78%이며, 4년제 대학 정원으로 좁혀서 보면 비수도권은 75%이지만 수도권은 48%에 그침
 - 이러한 고등교육 접근성의 차이는 총량적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차이로도 이어지는데, 2020년 기준 수도권 고교졸업자 66.4%, 비수도권 고교졸업자 78.1%로 큰 차이를 보임
 - 이와는 반대로,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대도시와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간 학력 격차가 심각하고, 코로나19 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는 경향(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도자료, 2022. 6. 13.)

■ 지역 간 이동의 연계성에 관한 실증분석: 졸업 시 경기 상황의 변화

- 대학 졸업 시 대학 소재지의 실업률이 증가하면 대학 소재지 권역 내 잔류 비중이 소폭 증가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약하며, 권역 내 타 시도로의 이동은 뚜렷하게 증가
 - 특히 권역 내에서 고교소재지로의 재이동이 큰 폭으로 증가
- 수도권-비수도권 간 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대학 졸업 시 지역실업률이 1%p 증가할 경우 수도권 고교졸업자의 수도권 취업 확률은 약 6%p 증가
 - 이는 고교소재지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권역 이동 가능성의 차이를 보여줌
 - 지역경기 악화 시 수도권 고교졸업자가 지방대학 졸업 이후 지방에 잔류하는 비중은 더욱 감소

V. 구조모형을 통한 정책 시뮬레이션

- 진학과 취업의 두 단계별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구조모형을 미시적 데이터로부터 추정하여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일 규모의 보조금을 지방대학 진학보다 지방인재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제공하는 편이 효과적으로 나타남
- 주어진 제약하에서 미래를 내다보며 현재의 선택을 결정하는 합리적 개인들로 구성된 경제모형을 수립
 - 각 단계별 결정요인(수도권/도시 선호, 거리, 수능 성적, 고등교육기관 유형, 지역·학력별 생애기대임금, 성별 격차 등)과 진학 및 취업 시의 지역 선택 간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고려
- 미시적 데이터로부터 모형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를 시뮬레이션함
 - ‘지방’(도, 광역시+도)의 ‘지역인재’(지역고교, 지역대학, 지역고교+지역대학)에게 지역대학 진학이나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 발생하는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봄
 - * 단, 지방대학이나 공공기관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교육 공급(대학)이나 노동 수요(기업) 측면의 전략적 대응과 관련된 분석도 중요하지만, 본 모형에서는 다루지 않음

- 정책실험 결과, 같은 지원액을 지방대학 진학보다는 지방기업 취업에 대해 제공하는 편이 청년층 인구유출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됨
 -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지원(예: 임금 보조, 세제상 혜택 등)은 비수도권 취업 확률을 약 7%p 증가시키며, 비수도권 진학 확률도 약 0.5%p 증가시킴
 - 예산 제약하에서 대상을 한정한다면,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으로 한정하는 편이 비용 대비 효과적으로 나타남
 - 반면, 1인당 지원총액 기준 동일 금액을 지방대학 진학 지원에 사용할 경우(예: 등록금·기숙사비 지원, 장학금 등)는 진학 단계에서 수도권 집중을 약 0.8%p 낮추지만, 취업 단계에서는 그 효과가 대부분 사라짐
 - 지방대학 진학과 지방기업 취업을 각각 지원하는 방안(표 6, 정책 2)은, 지방대학 출신자의 지방기업 취업만 지원하는 방안(표 5, 정책 3)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두 지원의 효과가 서로 상쇄됨을 알 수 있음
- 지방대학 진학에 대한 지원은 청년층의 지방 정주 목적보다는 교육 및 연구와 같은 본연의 목적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할 필요
 -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소시킬 경우 비수도권 재학생이 증가하는 효과는 있지만 졸업 이후 지역 선택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지방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경우에 지방 정주 확률도 증가

VI. 정책적 시사점

-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설계 시 청년층의 지역 선택 결정요인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
- 현재의 청년 대상 재정지원사업이나 고용·취업 관련 세제혜택 등은 대부분 ‘지방인재’의 ‘비수도권 취업’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결과적으로 수도권 거주를 장려할 수 있음
 - 수도권 생활이 주는 다양한 편의 때문에 동일한 임금이나 근로조건에서도 수도권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며, 전국 공통의 청년 대상 지원은 수도권 거주의 현실적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작용
 - 서울 및 서울 인근 주요 도시의 청년 대상 일자리·자산 형성·주거·복지 정책 등에는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장려하는 측면도 존재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정책은 정책의 효과성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 있음
 - 물론 지역 내 혁신생태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대학의 역할은 중요하지만, 모든 지방 대학을 유지하는 방향의 정책은 청년층의 지방 정주 관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음
 - 지방의 교육 및 일자리 질 제고에 강조점을 두고 정책 조합을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
- 청년 대상 학교-직업세계 이행기 지원정책은 지역적 차원을 명시적으로 고려할 필요
- 청년 대상 지원정책은 지역을 고려해 통합적으로 조율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년층의 수도권으로의 유입을 장려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함
- 예컨대 청년 대상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이나 세제상 혜택(예: 고용증대세제)에서 지방기업 취업을 우대하여 지원하는 구조를 대폭 강화할 필요
- 지방대학 지원정책은 청년층 유출 방지보다 교육과 연구의 질 제고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강화에 보다 충실하게 설계 필요
- 지방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및 연구의 질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의 지원은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지방 정주에도 기여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지역을 막론하고 교육의 질이 낮은 기관은 퇴출시키는 한편, 권역 간 고등교육기관 진학 기회와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을 함께 균등화해 나갈 필요
 - 한편,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필요
- 지역의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양질의 교육지원을 보다 구체화하고, 지역 노동시장 및 혁신생태계와의 연계 기능 강화

- 본 연구는 청년층 지역선택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었으며, 향후 지역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와 정책제언 필요
- 본 연구는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효율화 및 청년 정책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수행되어 분석의 대상 및 범위에 한계가 있음
- 지역 간 격차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전략 마련과 함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내실화와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장려할 필요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KDI정책포럼(2022. 9.)

4.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추진 / 기경위

-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유동성 공급, 경쟁력 강화, 재기 지원을 위해 2년간 41.2조 원 규모의 맞춤형 정책자금을 공급함
 - 유동성 공급을 위해 코로나19 특례 보증, 금리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 10.5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함
 - 코로나19 직접 피해업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의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 보증 공급(3.25조 원), 매출 감소·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유동성 자금 공급(2.1조 원)을 계획함
 - 코로나19 피해업체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 지원대상 및 한도를 확대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 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29.7조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함
-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추진」의 주요 내용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5조 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도입
 -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정상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평균 매출액

10~120억 원 미만인 법인 소기업

- (대환 대상) 대환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은행·비은행권 사업자 대출로서 2022. 5. 31.까지 취급된 대출
- (프로그램) 최대 6.5% 보증부 대출로 전환(8.5조 원)

○ 정책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한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 필요

- 금번 금융지원 방안의 대상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경영상 애로가 있어 자금공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중·저신용자로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받던 경우가 대부분임
- 대출 및 보증 부실로 인해 중소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 등의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및 보증의 면밀한 관리, 특례 보증에 대한 별도 관리 등 사전 위험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

▮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 동향 보고서(2022. 8.) ▮

5. 지방시대위원회,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 / 기경위

○ 지방시대위원회의 배경 및 필요

- 윤석열 정부는 전국의 고른 발전의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시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
- 지방시대 거버넌스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제시한 이유는 “중앙집권적 체제에 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권력의 집중이 수도권 집중”을 초래했다고 판단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 지방분권은 민주의 가치를 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권력을 이동시키는 권력 소재를 지역균형발전은 형평에 가치를 둔 삶의 총체적 수준으로 파악한 지역발전의 정도나 수준을 의미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에 대해서는 선 지방분권의 관점, 선 지역균형발전의 관점, 선후 불특정 관점, 통합의 관점 등이 존재
- 최근에는 양자의 동시 추진의 관점이 증가하고 있으며,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지방

분권이 지역균형발전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다소 많음

○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

-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실현하고 양자의 요구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임
- 현재 개별법에 의해 분절, 단절되어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지방시대위원회의 통합에 의한 거버넌스의 시너지 창출
- 현재 저분권과 저지역균형발전의 조합에서 향후, 고분권과 고지역균형발전으로 이행을 기본방향으로 추구
- 지방정부 역량의 획기적 강화, 지방시대위원회의 실행력 강화, 양자를 통합한 통합법 제정, 특별회계 재원의 확대 및 분권적 추진 등 필요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9.) ▮

6.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진단과 개선방향 / 행문위

○ 미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피할 수 없는 전략, ‘균형발전’

-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10개 국정과제를 제시함(대한민국 정부, 2022.7.)
- 균형발전정책은 다양한 성장동력원을 확보하여 국가 운영의 안전성 및 내실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생산함으로써 미래 발전을 위한 전체 파이(pie)를 키우는 전략임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현재와 문제점

- 그동안 정부는 자원재분배에 의존한 균등발전보다 지역적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화 발전을 지원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공간적·재정적으로 분산된 정책추진방식으로 인해 막대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창출하지 못함
- 수도권인구·산업집중이 높은 상태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과 투자가 병행되다 보니 수도권의 흡입력이 강화되고 균형발전정책은 효과를 보기 어려웠음

- 부처별 공모사업 위주의 지역산업 육성 방식으로 인해 정책·사업 간 연계성이 확보되기 어려웠고, 사업선정 및 추진과정에 자율성이 제한되어 지역이 자생적인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천과제

-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초광역권 내 중추거점도시(메가시티)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력한 혁신생태계를 구축해야 함
-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부처 간 협의 및 기능의 분담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함
- 지역이 고유의 특수성과 부존자원, 잠재력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자생적 혁신 역량을 갖춰 갈 수 있도록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강력한 권한의 이양이 필요함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8.) ■

7.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의 실효성 제고방안 / 행문위

○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이란?

- 윤석열 정부는 지역 휴게소를 환승허브 및 지역경제 활성화 복합타운으로 개발하는 공약을 제시함
- 고속도로 휴게소가 중요한 교통 결절점 역할수행, 고속도로-고속철도 간 연계 및 환승 시스템 개선을 통한 유연한 환승 서비스 및 교통수단 선택의 자유 제공
- 고속도로 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를 통한 고속도로 접근성 강화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특산물 판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이동 편의개선, 권역별 교통사고 대응 의료시설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복합타운 조성방안이 포함됨

○ 공공교통망과 민간교통 수단간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 지역별 교통여건 및 이용자 통행행태에 기반한 접근성 및 편의성 개선이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 성공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임

- 공급자(중앙정부 및 지자체) 주도의 교통정책에서 수요자(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정책기조 전환 필요
- 환승허브로서 고속도로 휴게소 기능제고를 위해선, 서로 다른 교통수단 간의 끊김없는 이동계획을 가능하게 하는 연계환승시설 구축과 더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Mobility-as-a-Sercice, MaaS): 디지털 플랫폼에서 이용자가 단일 통행 혹은 수단 간 환승 조합과 같이 유연하고 끊김없는 이동이 가능한 솔루션 제공

○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지역경제 활성화 타운 정책의 성공전략

- 데이터 분석에 기초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함
- 향후 실시간 교통량 정보 및 수집된 이용자 빅데이터(예: Hi-pass)를 활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행태(예: 휴게소 이용률 및 체류시간)의 분석 결과는 정책효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음

▮ 출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22. 8.) ▮

8.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성과에 관한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 복환위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필요
 - 2015년 이후 제도화된 제도로 소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주민 주도적 민관협력을 추동할 수 있는 동네 거버넌스 기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책적 지원 노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동 현황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 참여 민간위원 2,304명을 대상으로 조사(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 읍면동 협의체 운영취지에 대한 민간위원들의 합의 수준은 매우 높게 형성(약90%)
 - 운영과정(운영목표·역할·수행·의사소통) 및 운영지원(공무원 지지·역량 강화 지원),

운영성과(결정과정·특화사업 개발·협력관계)와 관련된 여러 측면에서 취약한 결과가 있으며, 특히 읍·면·동 간 활성화 수준에 차이가 있었음

○ 읍면동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중앙정부 및 광역시·도 차원의 읍면동 협의체 행·재정적 지원 강화, 특히 안정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 인력 증원과 인건비 지원을 적극 검토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역량 제고 지원, 주민 주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다각도 지원 필요
- 시군구 협의체와 읍면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촉진, 공식적인 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노력 강화 필요

▮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 9.) ▮

9. 러-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 농수위

○ 점증하는 글로벌 식량 안보 위기

- 러-우크라 전쟁 이후 아프리카·남아시아 등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 식량 안보 위기가 심화되고 있음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식량 접근이 어려운 인구 급증
 - ▶ 특히 러-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은 세계 식량안보 위협을 가중시키며 식량 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추가적으로 수백만 명이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빠질 것으로 예상
 - ▶ 글로벌 식량 공급 전망은 양호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높은 투입 가격으로 식량 가격이 급격히 상승
- '22. 7월 말 기준 글로벌 농산물 물가지수는 '22. 1월 대비 19% 상승
 - ▶ 주요 곡물인 옥수수과 밀 가격은 '22. 1월 대비 각각 16% 및 22% 상승
 - ▶ 저소득 국가의 94%, 중하위 소득 국가의 89%, 중상위 소득 국가의 83%, 고소득 국가의 70%가 높은 식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경험함

- ▶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식품 가격이 전체 물가 상승분을 초과하고 있음
- ▶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의 사람들이 고소득 국가 사람들보다 식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식량가격 상승은 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침
-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많은 국가에서 식량 수출 금지 등 무역 관련 정책 시행이 급증한 것도 식량 가격 상승의 주요인임**
 - ▶ 6.16. 기준으로 20개국은 세계시장에서 거래되는 칼로리의 7.07%에 영향을 미치는 33개의 식품 수출 정책 조치(수출 금지)를 시행했으며, 6개국은 글로벌 거래 칼로리의 2.88%에 해당하는 8가지 식품의 수출 제한 조치 시행
 - ▶ 이처럼 식량 가격이 상승하고 식량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1억 9,3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극심한 식량 불안에 노출
 - ▶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20년 이전 최고치보다 4천만 명이 증가했으며,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2. 6월에서 9월 사이에 20개 국가에서 식량 불안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

○ 식량 안보 위기 요인

- 최근의 식량 위기는 국가 간 분쟁과 기후변화 그리고 코로나,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고 있음

* 국제분쟁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 밀 가격을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림
 - ▶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옥수수과 밀의 4번째 수출국이자 해바라기유의 세계 최대 수출국임
 - ▶ 특히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22년 봄에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농업 인프라 파괴로 전쟁이 끝나더라도 작물 생산능력을 회복하는 데는 수년 소요 전망
 - ▶ 또한 서방의 러시아 작물 금수 조치는 식량 가격 급등을 초래

* 기후변화

- 기후변화는 식량 시스템을 취약하게 만들고 농작물, 가축 및 어업에 상당한 피해를

끼치고 있음

- ▶ 엘니뇨나 라니냐 등 이상 기온을 불러오는 기후변화 현상이 식량 위기 악화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음
- ▶ 특히 이상기후에 의한 강우량 변화는 곡물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용 가능한 가축 목초지 황폐화로 목축에도 영향을 미침
- 세계은행은 기후변화가 향후 10년 동안 1억 명 이상을 빈곤으로 몰아넣을 것으로 추정함
 - ▶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지난 50년 동안 폭염과 가뭄이 작물 생산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가 1964-1990년 동안 2.2%의 손실에서 1921-2015년 기간에는 7%대 손실로 세 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

* 에너지 및 비료 가격 상승

- 에너지 가격 상승은 물류비용 및 비료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며 옥수수 등의 바이오 에너지 전환으로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침
 - ▶ 특히 천연가스는 비료 생산의 주원료인데 하버(Habor)공정을 통해 천연가스로 암모니아를 생산하고 이를 질소비료의 주요 공급 원료로 제공
 - ▶ 질소비료는 식량 생산 증대와 전 세계 인구 증가에 크게 기여했으며 현재 지구상 약 절반이 합성 질소비료로 곡물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
 - ▶ 원자재가격 기관 ICIS의 비료 책임자인 julia Meehan에 따르면 “모든 비료들이 기록적인 가격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8년 최고치를 훨씬 뛰어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
- 비료와 연료를 포함한 농업 투입 비용이 식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축소 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 또한 미국의 경우 전체 비료 중 70%는 옥수수·밀·대두 생산에 사용되고 있어 비료 가격 상승은 이들 곡물 비용 생산 비용 증가로 연계

○ 국제 식량 가격 동향

- 7월 식량가격지수는 전월 154.3포인트에서 140.93포인트로 하락했으며, 지난 3월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수확 진행, 미국의 작황 개선에 따라 가격이 내렸고 유지류는 6월 211.8포인트로 하락한 171.1포인트로 집계
- ▶ 팜유는 주요 생산국의 공급량이 증가하고, 인도네시아가 국내 팜유 재고를 수출하면서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

○ 시사점

- * 최근 UN 중재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이 재개되며 곡물 가격이 급락했지만, 근본적인 식량 부족 문제 해결은 아님
- 이는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와 러시아의 곡물 생산 증가, 곡물 무역망 회복에 대한 희망으로 가격이 하락한 것임
 - ▶ 그러나 가격 하락이 식량 위기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고 분석가들은 분쟁 지속 등 가격을 상승시킨 근본 요인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분석
 - ▶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높은 식량 부족 문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 중 하나일 뿐임
 - ▶ 중장기적으로 엘니뇨 및 라니냐 지속 등과 같은 기후변화와 경기 침체에 따른 농업 부문 투자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리스크 잔존
- 또한 2022년 1월 이후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이 자국 식량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고 있어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킬 전망이다
 - ▶ 전 세계 총 곡물 생산량 중 약 15% 내외만이 수출되기 때문에 한 국가만이 수출을 제한하더라도 국제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 2007~2008년 인도와 베트남의 쌀 수출 제한 조치에 가격이 두 배 이상 폭등한 사례가 있음
- 많은 식량 전문가는 현재의 식량 부족 위기가 기후변화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및 전 세계의 분쟁이 끝나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
 - ▶ 채텀 하우스(Chatham House)의 선임 연구원 로라 웰슬러(Laura Wellesley)는 식량 가격이 더 오랫동안 상승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전반적인 상황은 곧 중단될 가능성이 없는 긴축 공급과 높은 가격으로 보이며, 소비자들은 영구적으로 높은 식품 가격에 익숙해져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

- 이 밖에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기후 변동성 증가로 곡물 가격이 “역사적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함
 - ▶ 이 회사의 수석 원자재 이코노미스트 캐롤라인 베이(Calroline Bain)은 “기후 변화의 영향이 커짐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수확량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언급
- * 2020년 기준 한국은 곡물 자급률 20.2%, 식량 자급률 45.8%로 OECD 국가 중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따라서 단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식량 안보 대책 마련 필요
 - ▶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①해외 조달 시스템 구축으로 안정적 공급원 확보, ②식량 자급 능력 제고를 위한 국내 생산 기반 확충, ③쌀 이외의 주요 곡물에 대한 식량 재고 비축 제도 운영 등 대책 마련 필요
 - ▶ 식량 위기는 생명권 및 건강권에 직결되는 중요 산업이며, 제품 가격이 고스란히 소비자 물가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식량 수급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 필요

┃ 출처 : POSECO 포스코경영연구원(2022. 8.) ┃

10. 지자체 간 해상경계의 설정과 관리를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 농수위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해양이 가진 풍부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관리**
 - 역사적, 지형적, 경제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을 결정하고, 분쟁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
 - 해상경계에 관한 규정 미비 : 현행 법령에 따라 지자체 관할구역에는 해양도 포함되나, 그 경계는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
 - 해양의 관리·보전·이용 등에 관한 다수의 법률에서는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인·허가 및 처분 등을 시행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가 발생, 분쟁 소지 존재

○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 1960년 이후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분쟁은 29건 : 매립지 관할권 분쟁(경기 평택시/충남 당진군 등 매립지 9건, 충남 당진군/경기 화성시/인천 옹진군 등 공유수면 분쟁, 충남 당진군/경기 화성시/인천 옹진군 등 조업 17건, 해양 풍력 2건, 인천 옹진군/충남 태안군의 골재채취 1건)

○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설정

-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은 ‘조업수역’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 그동안 어업면허를 발급하거나 연안·구획어업을 허가하며 구분했던 관습적 관할구역을 해상경계에 적용
- 헌법재판소 판례 : 해상경계에 관한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지역은 ‘등거리 중간선 원칙’과 ‘형평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 해상경계 결정
 - ※ 등거리 중간선 : 각 지역의 해안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가 떨어진 지점(중간 지점)을 이은 선
- 해당 지역의 행정관행, 역사적 사실 등의 자료조사 및 측량
- 중앙부처 공무원, 해양수산·지역·법률전문가 등으로 조직 구성 후 해상경계(안) 수립
- 지역주민과 지자체 의견 수렴·반영: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분쟁 발생 소지 최소화

○ 해상경계 규정 마련

- 육상은 「지방자치법」에서 경계를 결정, 해상은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관련 내용을 규정,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필요한 규정
- 해상경계의 설정 기준, 지자체 간 합의 절차, 해상경계의 심의·의결을 위한 중앙·지방 위원회 설치와 구성, 지자체 불복절차 및 처리 방법 등 필요, 기존 법률에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과 별도 신규 법률을 제정하는 것 중 어느 방안이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검토

○ 분쟁 조정 방안

- 해상경계와 관련된 분쟁 현황 : 29건(사법절차: 21건, 합의 : 8건)
- 사법절차 : 최종 판결까지 장기간 소요, 사법부 판단이 분쟁 지역에 국한되어 근본적인 해결에 한계(다른 지역에서 유사 분쟁 반복)

- 대법원 제소,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 상당한 금액과 시일 소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調整) 방안 필요
- 향후 해상경계 설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이익이 다수 발생 예상
- 사법절차 간소화를 위해 해상경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해당 위원회가 사법부의 판단을 대신할 만큼의 '전문성' 확보
 - '지자체' 간의 해상경계 분쟁을 '개인'이 포함된 다른 법률상의 분쟁과 같게 볼 것인지 등 추가적인 논의 필요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 9.) ┃

11. 마른 모래에서 물 쫄쫄...샌드담 기술 개발 국내 최초 성공 / 안전소위

건설연, 물 공급 소외지역을 위한 모래를 활용한 샌드담 기술 개발 및 강원도 춘천시에 샌드담 설치 성공

증발, 결빙에 강하고 깨끗한 수질의 물 공급 가능

- 한국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 이하 건설연)은 가뭄 시 급수차가 동원되어야만 하는 물 공급 소외지역에 물이 끊기지 않도록 공급할 수 있는 모래저장형담(이하 샌드담)을 환경부 연구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의 상수도 보급률은 97.5%이지만, 미보급지역과 소규모 수도시설(5,920 개소) 지역은 가뭄 시 취약지역으로서 안정적인 수원 확보가 중요하다.
- 샌드담(Sand Dam)이란 아프리카 지역과 같은 건조 지역에서 연간 드물게 발생하는 홍수를 저류시켜 흙 입자를 침전시킨 후, 그 속에 저장된 물을 건조 시에 활용하는 시설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시공된 바 없다. 샌드담은 모래 안에 물이 저장되므로 증발 손실이 적고, 모래층을 통과하여 수질이 개선되고 겨울에는 흙 속에 물이 저장되어 얼지 않는 장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 샌드댐에 대한 수요가 있는 장소로는 주로 산간 계곡 지역이다. 통상 이런 지역 주민들은 소규모 취수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극한 가뭄 시 식수 부족으로 인해 급수차가 동원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일례로 2016년 2월, 춘천시 계곡물 결빙과 수원 고갈 때문에 춘천시 물로리 등 9개 마을에 소방서와 춘천시 급수 차량 지원을 통해 식수를 공급하였다.
- 이에 건설연 수자원하천연구본부 연구팀은(팀장: 정일문 박사) 춘천시 북산면 물로리 지역에 국내 최초로 바이패스형(Bypass Type) 샌드댐을 시공하였다. 바이패스 방식이란 하천 옆 바닥이나 변두리의 자갈, 모래층에 함유되어 있는 물인 복류수를 간접 취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빠르게 흐르는 계곡을 직접 막을 경우 댐 유실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간접 취수의 방식을 적용하였다. 즉, 계곡 하천 옆 소규모 취수원 하부에 샌드댐을 설치하고, 확보된 공간에 모래를 채운 후 그 아래에 모래층을 통과한 물을 공급하는 배관 시설을 설치하였다.
- 샌드댐 건설로 인해 평상시의 공급유량은 평균 일 150톤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수질 역시 식수로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극한 가뭄이 오더라도 최소 10일 이상은 연속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가뭄 대응책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샌드댐 시설은 올해 말 춘천시에 이관되어 영구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
- 김병석 원장은 “개발된 샌드댐의 실증으로 여름과 겨울철의 극한 가뭄 및 결빙 시에도 깨끗한 수질의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본 성과는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수요대응형 물 공급서비스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상시가뭄지역의 지하수 최적 공급관리를 위한 IoT 기반 인공함양 well network 기술 개발(단장: 김규범 대전대 교수)”의 2세부 과제인 “다단식 Sand 댐 - 취수원 연계 활용고도화 기술 개발(2018~2022, 팀장: 정일문 박사)”과제를 통해 개발되었다.

붙임 1. 완공된 샌드댐 모습

붙임 2. 바이패스형 샌드댐 개요도

▮ 출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2. 9.) ▮

붙임 1

완공된 샌드댐 모습





붙임 2

바이패스형 샌드댐 개요도



| 샌드댐 설치 전 모습 |

12. 평화에 대한 위협 증대와 세계시민교육의 중요성 / 교육위

-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자신의 자서전 《어제의 세계》에서 1차 대전 발발 즈음 유럽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고한다.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장 선량한 사람들도 피 냄새에 취해 있는 것 같았다.” 시인, 교육자, 예술가, 지식인, 언론인이 앞장서 증오의 북을 두드리며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선동했다.
- 100여 년이 흐른 뒤 또다시 전쟁의 망령이 유럽을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네 달이 넘어간다. 이번 전쟁의 원인을 두고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러시아 정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와 서구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키우며 적대감을 부채질했고, 대다수 러시아 국민들이 이에 동조하며 전쟁을 지지했다는 사실이다.
- 평화를 위한 지식인과 교육자의 분투
 - 1차 대전 당시 프랑스 소설가 로망 롤랑과 오스트리아 출신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는 각국의 지식인들을 불러 모아 회의를 열고 전쟁 반대 성명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그 정신만 남았다.
 - 1차 대전 이후 국제연맹 산하에 국제지적협력위원회가 결성되어 유럽의 지식인, 과학자, 작가 등이 국가 간 상호 이해 증진으로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취지 아래 모여들었다.
 - 2차 대전이 끝난 뒤에는 그 정신을 유네스코가 이어받아 유네스코 헌장에 평화가 퇴보하지 않으려면 인류의 ‘지적·윤리적 연대’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는 원칙이 천명되었고, 유네스코에 가입한 회원국은 모두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다짐이 명시되었다.
 - 유네스코는 설립 직후부터 배타적 민족주의와 민족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한 국제이해 교육 사업에 힘을 쏟았고, 국제이해교육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평화교육, 인권교육, 민주주의교육, 관용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지속발전교육으로 변모해 최근에는 세계 시민교육이 그 흐름을 이어받고 있다.

○ 평화의 지평 확대

- 오늘날 평화는 상당히 포괄적 의미를 갖는다.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단, 국가, 인간과 자연 등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구조적, 상징적 차원의 다양한 폭력을 제거하거나 줄이며, 또한 인간사회의 불가피한 갈등을 비폭력적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을 말한다.
-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 불평등과 차별 같은 구조적 폭력, 혐오와 멸시, 따돌림과 모욕 같은 심리적·언어적 폭력, 다른 인종과 민족을 열등하고 미개한 집단으로 취급하며 불평등과 차별을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 지구 기후 교란과 생물다양성 파괴 같은 생태적 폭력이 모두 평화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다.
- 다양한 차원의 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강화하는 관계에 있음을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우리 내면의 평화,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의 평화, 거시적인 국가 간 평화, 자연과 인간 사이의 평화가 따로 떨어진 별개의 사안이 아니고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있는 문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 평화에 세계시민교육이 왜 중요한가

- 전쟁 부재의 평화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포괄적 의미의 평화를 위해서는 세계시민 교육이 더욱더 중요하다.
- 전쟁은 물론이고 여러 차원의 폭력을 줄여나가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방식을 바꿔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런 생각과 행동을 유인하는 사회구조와 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
- 이 과정에서 세계시민교육은 너와 나, 그들과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간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존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며, 타자를 두려워하거나 적대시하지 않고 더 깊이 이해하며 공존할 수 있게 해준다.
- 가짜 정보와 정치적 선동을 비판적으로 분별하고, 폭력과 적대가 아닌 대화와 상호 이해를 포함한 비폭력 해법으로 끝까지 추구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 공감력, 실천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바로 세계시민교육인 것이다.

○ 한국과 세계시민교육

- 100여 년 전 한국인들은 독립을 선언하면서 전쟁과 폭력이 아닌 평화를 외쳤다.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 좋게 새 세상을 열어갈 것을 일본에 권했다.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는 다시 대결과 적대의 시간으로 빨려 들어갈지도 모른다.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의 미래세대가 풍부한 독창성을 발휘하여 세계평화와 세계 문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세계시민교육에 힘써야 할 때다.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2. 7.) ▮

13.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서론)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었음**
 -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었고, 의원을 지원할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인사제도가 크게 변경됨
 -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의 의정활동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써 교육훈련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음
- 그동안 지방의회 교육훈련 운영실태를 파악하고자 **17개 광역의회의 4년간(2018~2021년) 직무 관련 교육훈련 실태**를 살펴봄
 - 4년 동안 광역의회에서 실시된 직무 관련 교육에 참여한 횟수를 보면, 광역의원 1인당 연간 1.10회, 직원의 경우 연간 0.58회의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다음은 지방의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으로 **국회의정연수원과 행정안전부 소속 자치인재개발원의 운영실태 분석**함
 -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 이후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조례안 입안 및 심사, 예산안·결산 심사, 행정부 견제 등 의정활동 관련 교육을 함
 - 연수원의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지방의회 의원연수, 지방의회 전문위원과정, 지방의회 실무직원과정, 지방의회 속기실무직원 과정 등이 있음
 -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지방의회 관련 교육실적을 보면 총 3,328명이 참여함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지방의원과 직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자 **지방의정연수센터를 2022년 2월에 개소함**

- 그동안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의 지방의회 교육훈련 참여율이 높지 않았으며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한계점으로 지적되는 사항
-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이와 더불어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프로그램이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등이 있음
- 그리고 지방의회 교육훈련의 지방의회 교육훈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비해 종합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이 부족하다는 점임

○ (결론) 향후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의원과 직원의 교육훈련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지방의회 교육훈련을 체계적으로 수립·이행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함
 - ▶ 이를 위해서 현재 선언적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 교육·연수 계획의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방안이 있음
 - ▶ 지방의회에서는 의원 및 사무직원의 교육훈련 기본계획과 연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특히, 초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요 과목을 포함해 의원별 맞춤형 교육연수 과정을 마련하고, 필수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권고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지방의회의원과 직원이 직무 관련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함**
 - ▶ 지방의원의 경우 교육훈련을 이수하면 해당 자료를 공개하고, 우수 의원을 평가하는 지표에 교육활동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음
 - ▶ 그리고 지방의회 직원의 경우에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요 교육과목을

-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의 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셋째, 지방의회 교육훈련 대상자인 의원과 직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2022. 9.) ||

IV. 법률 재·개정(2건)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의원 등 11인)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홍의원 등 11인)



IV. 법률 제·개정(2건)



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봉민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투자심사 제도를 두어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사업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한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르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사업 제안서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 등에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검토하게 하여야 하며, 그 중 총 사업비가 2천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등이 포함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현행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실상 같은 중복절차이므로 총 사업비가 일정규모 미만인 민간투자방식의 신규사업은 전문기관 등의 검토와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하여 이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의 사업 중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2천억원 미만인 신규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전문기관 등에서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타당성 조사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에 대한 **사업기간을 단축** (안 제37조제2항)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2. 9.) ||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홍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과거에는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과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을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음
- 그런데 지난 2014년 재산세 체납방지를 위하여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을 개정하면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하게 됨에 따라 자금조달을 위하여 담보신탁으로 사업용 토지의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 법규상 분리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음
-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신탁여부와 관계없이 산업단지 조성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지만 이미 2014년부터 2020년 말까지 담보신탁 제도를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한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여전히 재산세 분리과세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남게 되었음
- 해당 「지방세법」(법률 제12153호) 부칙 중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에 2014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경우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배제하는 등 조세형평과 실질과세를 실현하고자 함(안 법률 제12153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 제3항 신설)

▮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022. 9.) ▮